

난개발 부르는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진실 공방’

광주시 “관리주체인 복구가 요청” vs 복구 “광주시 먼저 고시” 환경단체 “무등산 보호 고민없는 안일행정 결과물... 책임져야”

광주시의 ‘광주 제 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광주일보 9월 6일자 6면>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빚어질 수 있는 무등산 자락 난개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이뤄진 광주시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산대 면적(1.04km²) 5배 규모의 땅에 음식점, 펜션, 고급주택단지 등이 무더기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개발·보존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복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광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진>를 내고 각화정수장 폐쇄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앞서,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속 조치였다. 각화정수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2021년 이후 폐지하고 제4수원지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한다는 게 고시 내용의 골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이같은 고시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복구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한 상태에서 상수도사업본

부의 공문은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복구 설명이다. 복구는 이같은 점을 들어 4수원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측이 이날 내놓은 ‘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복구가 요청한 것으로 광주시가 요청한 게 아니다’는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복구 입장이다. 상수도사업본부측이 지난 2월 내놓은 ‘2022년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에도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광주시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도사업본부측은 상수원보호구역인 4수원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난 2003년 3월 복구가 넘겼기 때문에 보호구역 해제 요청의 주체는 복구가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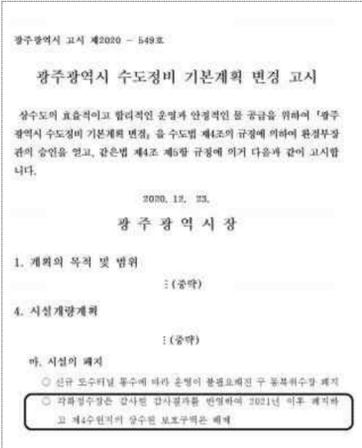
일단, 양측이 책임 관계를 떠넘기는 데는 무등산

자락 난개발에 대한 고민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환경단체 등의 지적이다. 음식점·펜션, 대규모 단독주택단지 등이 들어서는 개발 행위로 예상되는 무등산 자락 환경 파괴에 대한 고민없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환경단체 안팎에서는 해당 행정기관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무등산의 보호에 대한 고민 없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등산보호협의회 관계자는 “4수원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 된다고 해도 무분별한 난개발은 안된다”면서 “해당 마을의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개선 하는 정도의 개발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고급빌라와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모라 부르며 접근... 달콤한 언변에 속아 수십억 날려

재력이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사기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구미 공장에 투자하려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로 주고 매월 1000만원을 주겠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 받아주면 원금, 이자 주겠다”, “오피스텔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원금을 갖고 매월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뻔한 사기 수법임에도, 11명의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A씨에게 거액을 건넸다. 피해액만 80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이 A(46)씨와 연인 관계거나 친구, 동창, 직장동료, 가족 등 인맥으로 얽혀 있는 사이도 아닌, 생판 모르는 ‘남’인데도 이런 범행을 당했다.

연예인급 외모 수준은 아니지만 깔끔한 외모에 ‘스윗한’ 언변과 자상함이 한몫을 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도 “나도 속아서 돈을 건넨 것 같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겉모습이나 행동, 말로부터 풍기는 선량한 이미지를 갖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기술이 탁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풍모를 좋은 일에 쓴다면 모르지만 남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데 활용할 경우

11명에게 80억 가로챈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9년 선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 여성들을 ‘이모라 부르며 매너 좋고 달콤한 말솜씨로 챙겨주는 자상한 남자’로 자신을 포장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도 그런 A씨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다. 피해자들이 친한 동료·친구에게 A씨를 ‘진절할 조카’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수도 늘었다. 이렇게 A씨에게 속아 거액을 건넨 피해자만 11명.

A씨는 광주시 광산구 원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된 ‘이모’ B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11회에 걸쳐 13억5000여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틈틈이 안부 전화를 하며 B씨 환심을 사고 조카 행세를 할 정도로 친밀해졌다. 이후 B씨에게 대학교수인 C씨를 소개받은 뒤 40여차례에 걸쳐 공장 투자금 명목 등으로 28억6000만원을 뜯어갔다. C씨를 통해 알게된 C씨 직장 후배에게도 3900여만원을 챙겼고 B씨 남편에게 원룸을 산 사람들에게도 접근, 13억을 받아 가로챈다.

피해자들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눈치채지 못

했고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들뜬말 것을 대비, 피해자들에게 돈의 일부를 조금씩 입금해주거나 고가의 수입자, 명품 시계, 가방, 거액의 현금 다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결국, 피해자들은 노후대비용 부동산 뿐 아니라 연금 자산조차 털렸다. 모든 재산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거액의 자동차 할부금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A씨가 월세로 계약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속인 뒤 “이 아파트를 줄테니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라”며 전세금도 빼내 월세 아파트에서조차 쫓겨날 형편에 놓인 피해자도 생겼다.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중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처지에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건조한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거짓말에 능숙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형사1부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떡집 위생 점검 6일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가공팀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관내 한 떡집에서 제품의 위생상태와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전남대병원 파업 철회... 오늘부터 정상 업무

노사 일단협 잠정 합의

전남대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와의 2021년 임금·단체협상이 잠정합의 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일 오후부터 시작해 6일 오후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지난 3일부터 진행됐던 파업이 철회되고, 정상업무에 돌입했다.

이번 노사 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0.9% 인상 ▲필수교육(법정의무교육, 인증 교육 등) 이수자에 한해 교육휴가 1일 부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때 청원휴가 3일 등이다.

안영근 병원장은 “파업 기간 중 지역민께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원활한 소통과 타협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병원과 의료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필기 성적 중심 선발 아니다”

대법원 법관 선발 주장 반박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6일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선발하는 현행 법조인원회 제도에서의 법관선발 절차와 관련해 필기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관선발 절차의 첫 단계인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대해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는 오픈북, 합격/불합격 시험으로 통과율이 70~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분야만 응시하면 되고 합격하면 2년간 법관임용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며 “필기시험 성적은 이후에 진행되는 판사 임용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관 임용 최소 경력이 5년이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독식 현상이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절차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져 특정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취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515㎡(구 156형) 대지 582㎡(구 176형)
- 지하 1층, 지상 9층 지하 1층, 지상 10층
- 46㎡(구 14형), 64호실 49㎡(구 15형), 72호실
- 매매 - 18억5천만원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中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中**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